

# 6·25전쟁 이후 북한 대남도발 현황과 과제

- 연대별·집권정부별 사례를 중심으로 -

姜昌國\*

1. 서론
2. 테러의 개념과 북한의 대남도발 수행 기구
3.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4.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 과제
5. 결론

## 1. 서론

우리는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가장 호전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2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가 새로운 긴장 국면에 돌입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북한이 대남도발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 노선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에 의한 대남도발은 물론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

\* 혜천대학 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미국을 상대로 자행된 2001년 9·11사건은 테러리즘이 전쟁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각국은 적대국과의 전면전이나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군 간의 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안보상의 위협은 물론 과거와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테러리즘에 대비함은 물론, 북한은 6·25전쟁 이후 대남도발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무기체계의 발달로 개인화기나 폭발물의 파괴력이 증대되어 대남도발과 테러리즘에 의한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화생방 무기, 그리고 핵무기에 의한 대남도발과 테러리즘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테러의 개념과 북한의 대남도발 수행기구,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을 연대별, 집권정부별로 살펴본 다음,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 2. 테러의 개념과 북한의 대남도발 수행 기구

### (1) 테러의 개념과 유형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세 가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첫째는 재래식 전쟁(conventional war)이요, 둘째는 핵전쟁(nuclear war)이요, 셋째는 테러리즘(terrorism)의 위협이 바로 그것이다.<sup>1)</sup> 이들 세 가지 공포 중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은 1960년대 재래식 전쟁 혹은 핵무기 사용 등과 같은 전면적 전쟁 수단을 피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방법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terror)를 '초국가집단 또는 국가의 비밀요원이 다수

---

1)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7), p. 13.

의 대중요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투원 또는 비전투원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sup>

오네일(O'Neil)은 '테러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분쟁의 한 형태이며, 장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독단적으로 비도덕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남(O. Zinam)은 '테러는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이 공포와 항복을 유발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심리적,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할 것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킨슨(Paul Wilkinson)은 '정치적 테러리즘은 강압적 협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정치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 또는 정부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는 행위이며 살인과 파괴, 그 위협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했다.<sup>3)</sup>

랜드너(Geprge Landner)는 '테러리즘이란 정치적 상징 효과를 얻기 위한 폭력의 사용 또는 그 위협으로써 이는 직접적인 희생물보다 더욱 포괄적인 공격 목표와 대상에게 심리적 축격을 가할 목적으로 기존의 정부 정권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했다.

최진태 박사는 '테러리즘이란 테러와는 구별되는 폭력적 행위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항공기 납치, 요인 암살, 공중 시설 폭파 등을 통해 사람에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sup>4)</sup>

테러리즘은 공포와 폭력을 내포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강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테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sup>5)</sup>

결국 테러는 자연적 현상이며, 테러리즘은 폭력의 조직적·의도적 이용으로 강압적이며, 희생자 혹은 희생자와 연관된 모든 사람, 그리고 대중들의

2) 최진태, 전계서, p. 17.

3) 김태준, 『테러리즘-이론과 실제』(서울: 도서출판 불명, 2006), p. 22.

4) 최진태, 전계서, p. 19.

5) 김태준, 전계서, p. 27.

의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적인 총체적 행위이며, 이를 강제, 협박, 위협을 통해 폭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테러는 테러리즘 없이도 발생이 가능하며, 테러는 테러리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6)</sup>

도발(provocation)은 “집적거려 일을 일으키는 것<sup>7)</sup>, 다시 말해서 상대를 자극함으로 전쟁, 분쟁 등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테러와 공작 임무 역시 광의의 도발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종 테러와 대남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정치적·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금도 한반도와 주변에서 각종 도발과 테러리즘은 계속되고 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의 주요 테러 및 대남도발은 요인 암살, 항공기 납치, 해상 선박납치 등이었으며, 사이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sup>8)</sup>에 의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인암살 테러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테러의 형태로 특정인물을 은밀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행위로서 북한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던 테러의 주요형태이기도 하다.

항공기 납치 및 폭파 테러는 수백 명이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으로 테러의 유형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여객기가 납치되어 승객들이 인질로 억류되거나 폭파되는

6) 최진태, 전계서 p. 20.

7) 민중서림, 『옛센스 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2002), p. 659.

8)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이용준, 『북한 핵-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 2004. 5. 5. 참조. 흔히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로 불리는 대량살상무기는 일반적으로 인명살상 및 시설 파괴의 방법과 규모 등에 있어 재래식 무기와 구별되는 핵·생물·화학 무기를 포함한 3대 무기체계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 이후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아래와 무기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말로는 대량살상무기·대량과 괴무기로 번역된다. 생화학무기·중장거리미사일·핵무기 등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막대한 파괴력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미 대폭발 테러 사건(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라크·북한·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우에 사회적·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해상선박 납치 및 폭파 테러는 해상의 선박을 납치 및 폭파하고 선박시설을 파괴하여 테러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납치보다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비교적 적었으나 앞으로 그 가능성은 높아갈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 테러는 일반적으로 화학무기·생물학무기·핵(방사능)무기를 사용하는 테러로서, 대량살상무기는 크기도 작고 비용도 싸지만 무차별적 살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사용되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여 왔으며, 크기도 소형화하여 은밀성·이동성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테러 및 대남도발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용위협만으로도 한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본다.

## (2) 북한의 테러 및 대남도발 수행 기구

북한은 테러와 대남도발을 위한 책임조직과 행동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부대와 같은 성격의 조직인 북한의 테러리즘 책임조직은 상황에 따라 테러리즘 행동조직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조직은 실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sup>9)</sup> 북한의 대남도발과 테러리즘 수행을 위한 조직이 대남공작의 환경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어 왔으나 전체적인 관장은 노동당이 담당하고 행동조직은 인민 무력부가 관장하지만 기타 여러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테러리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술차원의 테러리즘 책임조직으로서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에서는 직접침투, 해외공작, 대일공작, 대남심리전 등을 담당하고, 연락부는 공작원을 양성, 훈련, 침투임무를 수행하며, 조사부는 공작원들의 기본교육 및

9) 구광모, 『북한의 테러 전략』, 『국제정치논집』 24집 2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4), p. 199.

안내, 호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정치보위부와 사회안전부에서는 북한 내의 테러리즘을 지휘하며, 인민무력부는 대남도발 및 해외 테러리즘을 자행하거나 지원한다. 북한의 테러와 대남도발을 수행하는 기구<sup>10)</sup>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당이 계획-지휘를 담당하고 인민무력부가 실행한다.

연락부는 남과간첩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예하에 지역공작, 정당 및 군부의 해외공작, 공작전술 연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연락부는 공작원을 선발, 양성, 훈련, 침투시키는 임무와 지하당 구축 공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450여 명 정도의 조종요원으로 대남공작과 등 16개 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해외공작부는 해외교포 교섭 및 침투임무를 맡고 있는데 외항선박을 가지고 무역을 위장하여 국제 테러리스트들과 공작장비를 수송하면서 테러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공작금을 벌어들이는 임무도 수행한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임무달성을 위하여 청진·원산(제313부대)·해주·남포·사리원·개성 등 6개의 초대소(Station or Department)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북한 소유의 외항선박 50여 척 가운데 20여 척이 연락부 소속이며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때의 “동건 애국호”도 연락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1)</sup>

---

10) 김태준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pp. 214-217. 북한의 테러 전담기구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체제 특성과 국가지원테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 북한의 테러리즘이 어떤 계통으로 통해 집행되는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해당된다.

11) 김창순, 『북괴의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실태 및 이를 이용한 대남 “테러” 전략』 치안본부 내 “테러” 연구(V) 외사집무자료 85-3, 1985.11, p. 8.



밝혀졌다.

특수 공작 기구로서 북한은 1979년 10·26 사태 및 19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당 대남특수공작 기구 내에 한국 내에서의 무장봉기유발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대남특수공작 기구를 만들었다. 1979년 10·26 직후인 11월에 무장반란을 유발할 목적으로 특수공작 기구인 대남지도부를 설치하였고, 1980년 12월에는 정치범 탈취, 교도소 폭파 용공분자 도피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9인의 연락공작부를 1981년 11월에는 요인암살, 시설폭파 등 대남교란 책동을 전담하는 특수공작부를 설치하였다.<sup>13)</sup>

특수 공작대는 1980년 10월에 조직된 것으로 한국의 요인암살, 주요시설 폭파, 대남 및 해외심리전 공작을 목적으로 조직된 특수공작대가 구성되었다.<sup>14)</sup> 이 조직은 극열 분자들을 중심으로 조총련 및 해외에 있는 친북조직원들로 망라되었고 김정일의 직접 지휘하에 부여받은 임무수행을 위해 철저한 육체 훈련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 캐나다, 니카라과, 스웨덴, 덴마크, 일본, 앙골라 등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 랑군에서 1983년 10월 9일 발생한 전두환 대통령 암살기도 폭탄 테러리즘사건<sup>15)</sup>의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제771군부대는 총참모 경찰국 직속의 저격여단으로 개성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 3.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 (1) 북한 대남도발의 일반적인 유형과 특징

북한 대남도발의 목표는 남·북한 대결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 사회에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또한

13) 김태준, 전계서, p. 216.

14) 김창순, 전계서, p. 9.

15)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각료 장관 4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사망하였다.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부의 대테러리즘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국민생활의 불안과 탄압 등을 유도하여 정부에 대한 무능력과 불신감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한국에서의 혁명여건을 성숙시켜서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무능력과 불신감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한국에서의 혁명여건을 성숙시켜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sup>16)</sup>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이 사용한 테러리즘의 주요 행태를 살펴보면, 주로 국가원수 및 요인 암살, 항공기 납치나 폭파, 민간인과 어선 납치, 주요 시설물에 대한 테러 등을 들 수가 있다.

북한 대남도발의 일반적인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17)</sup>

첫째, 요인 암살이다. 첫 번째 요인 암살 기도는 1965년 7월 경기도 송추지역의 무장공비 침투사건,<sup>18)</sup> 두 번째는 1968년 1월 21에 발생한 김신조 사건이다. 북한의 124군부대 소속 테러리스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남파되었다.<sup>19)</sup> 대통령 암살기도는 저지되었고 김신조를 제외한 28명의 테러리스트는 사살되었으며, 2명은 북으로 도주한 것으로 2월 3일에 작전은 종료되었지만 아군은 경찰을 포함해 30명이 전사하고 52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sup>20)</sup>

16) 김두현, 전계서, pp. 244-245.  
 17)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의 유형, 즉 요인암살, 항공 테러리즘, 민간인 납치 및 어선 납북, 주요 시설물에 대한 테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1997), pp. 125-131 참조.  
 18) 김두현, 전계서, p. 249.  
 19)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1997), p. 126.  
 20)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 II(1961-1980)』(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31-47. 부대별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간부/사병)

구 분	1사단	25사단	26사단	30사단	수경사	1110공병	259수자대	미2사단	경 찰	민 간	계
전과	사살	3	2	10	4	1	1	5	2		28
	생포				1						1
피해	전사	3/9		0/5		1/0	0/2	0/4	1/0	0/5	5/25
	부상	2/17	0/4	1/7		0/2	0/1	0/3	0/10	0/3	3/49

정부는 1·21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968년 2월 7일에 자주국방태세를 선언하고 파월군을 철수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병력증강책으로 향토예비군의 편성 및 무기 생산공장의 건설을 역설하였다. 이리하여 1968년 4월 1일부로 2,000,000명의 향토예비군을 편성하였고, M-16 소총 및 탄약공장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72년에 착공하여 1973년 11월에 준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본부, 『1·21무장공비 침투사건 요약』 (서울: 육군본부, 1996. 9. 20)을 참조.

세 번째는 대통령 암살 기도로 1970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묘지를 찾아 추도사를 할 예정이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북한이 파견한 3명의 테러리스트들이 국립묘지 입구 현충문에 원거리 조종 폭탄을 설치했으나 조작 실수로 미수에 그쳤다.

네 번째도 대통령 암살 기도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서 발생했다. 광복절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극장에서 기념사를 하는 동안 북한이 포섭한 재일동포 문세광이 박 대통령 저격을 시도했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은 암살을 모면했지만,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와 합창 단원 한 명이 살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21)</sup>

다섯 번째도 대통령 암살 기도로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랑군의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으로 또다시 계속됐다. 북한의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의 특수 부대 소속 테러리스트 세 명이 원거리 조정 폭탄으로 서남아·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국 중에 첫 번째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 중인 전두환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 이 사건으로 네 명의 장관을 포함한 열일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북한 미얀마 대사관은 폐쇄되었고 미얀마는 북한과 국교를 단절하였다.<sup>22)</sup>

둘째, 항공기 납치 및 폭파다.<sup>23)</sup> 북한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공중 폭파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결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최초의 항공기 납치는 1958년에 승무원과 승객 32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로 오던 국내선 민항기를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던 테러리스트가 북한으로 공중 납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10여 년이 흐른 1969년 12월 북한 테러리스트가 강릉에서 서울로 비행 중이던 민항기를 또다시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항공기와 함께 납치된 51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39명만이 납북 66일 만에 송환되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김포공항에서 강력한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공항 시설 일부가 파괴되었고, 30여 명의 사

21) 최진태, 전계서, p. 126.

22) 김두현, 전계서, p. 249; 김태준, 전계서, p. 268; 동아일보, 1984. 9. 4. 참조.

23) 최진태, 전계서, pp. 127-129 참조.

상자가 발생하였다. 북한이 파견한 테러리스트 혹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국내외 테러리스트가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한국의 관문인 김포 국제공항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살상하여 한국의 치안 상태가 극히 불안하다는 인상을 국제 사회에 심어 주려던 사건이었다.

1987년 11월 29일 아부다비를 출발해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가 미얀마 랑군의 지상 통제소와 교신 후 항로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1987년 12월 3일 안다만 해에서 항공기 잔해를 발견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체포되어 한국에 인도된 마유미(김현희)는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었다. 대한항공 858기 공중 폭파 사건은 한국 내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여 1987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 게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sup>24)</sup>

셋째, 민간인 납치 및 어선 납북이다.<sup>25)</sup> 1978년의 영화배우 최은희와 영화감독 신상옥 부부의 납치, 음악가인 윤정희·백건우 씨 부부 납치 미수,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일본 여인의 납치 등 외국인을 다수 납치하여 억류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1958년 이후 1990년 초까지 백령도 공해상에서 어선 수원 32호 납치와 해왕호 납치 등을 포함하여 동해와 서해에서 어로 중인 한국어선과 선원을 납치하여 인질로 억류하거나 철저한 세뇌 교육과 협박을 통해 간첩 임무를 부여해 납파하기도 했다.

넷째, 주요 시설물에 대한 테러이다.<sup>26)</sup> 북한은 1967년 9월 5일에 경원선 열차 폭파 사건을 일으킨 바 있고, 나흘 후에 서울-문산 간 철도 폭파 사건을 기도하기도 했다. 1983년의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1986년의 김포공항 폭파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특히 1983년 7월 29일 북한 공작원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감행한 월성 지역 침투 기도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테러였다.<sup>27)</sup>

24) 최진태, 전계서, p. 129.

25) 김두현, 전계서, pp. 250-251; 김태준 전계서, p. 273; 최진태, 전계서, p. 130.

26) 최진태, 전계서, pp. 130-131.

27) 조용관·유지웅 옮김, Joseph S. Bermudez 저 『북한과 테러리즘』 (서울: 고려원, 1991), pp. 96-98.

북한의 테러리즘은 동해의 강릉 및 남해안 등에 잠수함(정) 침투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면 대화·일면 도발이란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도 당 간부들에게 평화 제안을 절대 믿지 말라고 역설했으며, 2001년 12월 북한의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에 발각되어 추적당하는 과정에서 격침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중성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대한 정치적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과 테러에 대한 위협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6·25전쟁 이후 연대별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북한은 폭력과 테러리즘으로 정권을 세운 집단이다. 공산주의 혁명의 최고 전술형태가 무장폭력 봉기인데 테러와 게릴라 전술이야말로 혁명전쟁을 확대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보고 있다. 북한의 대남도발의 연대별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8)</sup>

1950년대 시작하여 10년 주기로 여러 변화 단계를 볼 수 있다. 북한은 일당 독재와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러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도발은 한국의 사회 혼란을 조성하여 그들의 정치적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맞추어져 있다고 본다.

1950년대에는 6·25전쟁 직후라서 또다시 재래식 전쟁, 즉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58년 민항기 납북 사건이 그 예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남도발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이다. 항공기 납치와 어선 납치, 김신조 일당의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 등이 있었다. 박

28) 대테러정책연구원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소장 최진태 박사), '북한 테러리즘' [www.terrorism.or.kr](http://www.terrorism.or.kr)(검색일: 2010. 4. 18.)

정희 대통령을 살해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북한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려 보자는 정책을 구사한 시기이다.

1980년대에는 대남도발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1983년 미얀마 랑군에서 전두환 대통령 암살기도, 1987년 KAL기 폭파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서게 되었다.

〈표 2〉 6·25전쟁 이후 연대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구 분	북한의 대남도발(지상·해상) 사례		비 고
	지상(내륙) 무장공비 사건	해상(해안) 무장공비 사건	
1950년대	1954.8.25. 충남 천안 1955.5.22. 전남 장성 1956.1.7. 경북 청송 1956.6.14. 경북 월성 1956.7.12. 전북 정읍 1956.8.8. 강원 영월 1957.7.1. 경기 가평 1958.4.28. 경기 파주 광탄 1958.5.20. 경북 포항 1958.6.8. 경기 고양 1958.6.13. 강원 김화 간첩귀순 1958.6.24. 강원 춘성 1958.9.15. 경기 강화도 1958.10.12. 경기 파주지역 1958.11.4. 경기 임진강 1959.5.30. 경남 산청 1959.6.17. 경기 양주군 마차산 1959.7.22. 대구 팔공산 1959.8.4. 전북 부안 1959.8.30-8.31 경기 파주·양주	1957.4.16. 경기 연평도 어선납치 1957.7.24. 경기 연평도 무장간첩선 1957.11.9. 강원 거진 어선납치 1958.4.29. 경기 연평도 어선납치 1958.7.10. 강원 속초 근해 1958.9.8. 경북 울릉도 근해 1958.9.17. 경기 소연평도 1958.11.18. 경기 아산만 입파도 1958.11.24. 강원 거진 근해 1958.12.6. 강원 고성 어선납치 1959.7.19. 충남 서산 서해앞 옹도 1959.7.24. 경기 소연평도 1959.8.8. 경기 서해 휴전선 1959.8.18. 서해 비압도 1959.11.13. 동해상 어선납치 1959.11.26. 서해 침투	이승만 정부 (1953-1960)
1960년대	1961.3.24. 경기 파평산 1961.11.3. 경남 거제도 1963.7.30. 경기 파주 1966.9.1. 서울 1967.6.27. 강원 영월 1967.7.19. 전북 정읍 1968.4.3. 충남 서산 1968.7.29. 전남 목포시 허사도	1964.8.8. 남해군 당포리 1969.3.16. 강원 주문진 1969.6.8. 강원 북평 1969.6.12-17. 흑산도(1) 1969.6.14. 전북 부안 1969.7.24. 전남 흑산도(2) 1969.9.20. 군산 오식도	박정희 정부 (1961-1979)
1970년대	1970.4.8. 경기 파주 1970.6.22. 현충문 폭파 1971.9.17. 경기 김포 1973.5.5. 전남 금당도 1974.5.20. 제주도 추자도 1975.4.27. 부산 1975.6.28-8.1. 광주-전북 완주	1970.11.8. 인천 울도 1975.9.3. 전북 부안·고창지역	

구 분	북한의 대남도발(지상·해상) 사례		비 고
	지상(내륙) 무장공비 사건	해상(해안) 무장공비 사건	
1980년대	1980.3.27. 제15사단 DMZ 1981.6.29. 제28사단 필승교 1983.6.19. 제101여단 문산 임월교 1984.9.24. 대구 간첩 주민 살해	1980.11.3. 전남 횡간도 1980.12.1. 경남 남해도 1982.5.15. 강원도 저진해안 1983.8.4. 경북 월성해안 1983.8.13. 독도 근해 간첩선 1983.12.3. 다대포근해 반잠수정 1985.10.19. 부산 청사포 간첩선	전두환 정부 (1980-1987)  노태우 정부 (1988-1992)
1990년대	1992.5.21. 제3사단 DMZ 1995.10.24. 충남 부여 무장간첩 1997.7.16. 제3사단 GP 교전	1995.6.15 제1연평해전 1995.10.17. 임진강 무장공비 1996.9.18. 강릉해안 잠수함 1998.6.22. 속초해안 잠수정 1998.7.12. 동해시 무장공비 1998.11.20. 강화도 간첩선 출현 1998.12.17. 남해 반잠수정	노태우 정부 (1988-1992) 김영삼 정부 (1993-1997) 김대중 정부 (1998-2002)
2000년대	-	2002.6.29. 제2연평해전 2009.11.10. 대청해전 2010.3.26 천안함침몰사건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0. 4월말)

\* 출처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對非正規戰史 (1945-1960)』, (서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12); 국방군사연구소, 『對非正規戰史 II (1961-1980)』,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8.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對非正規戰史 III (1981-2000)』,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8); 조선일보, “대청해전,”(조선일보, 2009. 11. 17), A6면 참조·재정리.

북한의 대남도발은 동해의 강릉 및 남해안 등에 잠수함(정) 침투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면 대화·일면 도발이란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중성은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적화통일에 대한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곧 북한의 대남도발과 테러에 대한 위협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북한이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 2>에서 제시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지상 및 해상을 통한 주요 도발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남북 분단 이후 줄곧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내 요인암살, 항공기 납치

및 폭파, 어선 및 민간인 납치 등 테러와 대남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전 세계 29개국에서 반정부 학생시위 선동, 폭동, 분규, 배후조종, 국가원수 암살교사 등 반정부 세력에 의한 정부 전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테러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1950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협정의 준수는 고사하고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상, 해상, 공중으로 200여 건의 주요 위반 사건이 있었다. 북한은 대남도발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분열 책동은 물론 궁극적인 대남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본다.

<표 3> 북한군의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 현황

구분	총계	'53~'60	'61~'70	'71~'80	'81~'90	'91~'00	'00~'03	비 고
소계	211	13	82	32	21	45	18	
육상	103	1	37	11	10	32	12	
해상	86	7	40	14	7	13	5	동해: 41건 서해: 32건 남해: 13건
공중	22	5	5	7	4	0	1	

\* 출처 :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6집, (서울 : 합참정보본부, 2003. 12), p. 140.

이와 같은 북한의 테러와 대남도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9)</sup>

첫째,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테러와 대남도발이다. 북한은 변함없는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 최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전문적으로 훈련된 특수 공작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자금, 훈련, 전략, 전술 및 작전에 이르는 조직적 행동을 지원한다.

둘째, 직접적인 테러의 대상은 주로 한국에 한정되고 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 내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의 혼란조성에 의한 국력 소멸과 미국 내의 여론을 악화시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 저지 및 주한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다.

셋째, 국제혁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폭력 수출이다. 북한은 60년대 중반부터 무력 적화통일을 지원하였다. 1966년부터 북한은 중남미·아프리카

29) 김태준, 전계서, pp. 274-275.

등 35개국에 테러리스트 훈련단 및 고문단을 파견하여 게릴라 및 테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94년 9월까지 해외에 파견한 북한의 훈련단으로부터 교육받은 테러리스트의 수는 5,000-8,00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에는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악의 축'(Axis of evil)<sup>30)</sup>이란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북한이 테러리즘 지원국이며 테러리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를 했다. 북한의 경우 1987년 KAL기 폭파 이후 국제 테러리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나 1996년 10월 최덕근 영사와 1997년 2월 이한영 살해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다.

넷째, 북한은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을 조성시킨다. 북한은 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대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대중의 동원과 지속적인 공격적 행위를 통해 전쟁 발생에 대한 긴장과 위기감을 조성시켜 왔다.

〈표 4〉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사례

사 건	형식과 시기	내 용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1968.1)	김일성, 이후락 중정부장에게 구두 메시지 (1972.5)	“대단히 미안한 사건, 좌익동맹분자들이 한 짓이지 내 의사나 당 의사가 아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76.8)	김일성, 유엔군사령관에게 구두 메시지 (1976.8)	“유감스럽게 생각함. 사건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을 경주해야”
서울 불바다 발언(1994.3)	김일성, CNN 등 해외방송사 회견 (1994.4)	“서울 불바다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
시아펙스호 인공기 계양 (1995.6)	전금철 쌀 회담 단장, 한국측 대표에게 전문 전달 (1995.7)	“아래 일꾼들의 실무적 착오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함”
북한 잠수함 동해 침투 (1996.9)	외무성 대변인, 유감 표명 (1996.12)	“막심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
제2차 연평해전 (2002.6)	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 한국측 대표에게 전화 통지문 (2002.7)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2008.7)	명승지종합개발 지도국 담화 (2008.7)	“유감스럽게 생각함”

\* 출처 : “과거 북한의 유감 표명 사례”(자료: 통일부), 조선일보, 2009. 9. 9, A4면.

30) www.povteen.com/now.html(검색일: 2006. 4. 20)



다섯째, 북한은 대남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이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로 마지못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갈등만 조장할 뿐 진정으로 사과한 사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남북 분단 이후 줄곧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내 요인암살, 항공기 납치 및 폭파, 어선 및 민간인 납치 등 대남 테러리즘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전개해온 테러 및 대남도발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sup>31)</sup>

첫째,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테러 및 대남도발이다. 북한은 변함없는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 최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전문적으로 훈련된 특수 공작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자금, 훈련, 전략, 전술 및 작전에 이르는 조직적 행동을 지원한다.

둘째, 직접적인 테러 및 대남도발의 대상은 주로 한국에 한정되고 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 내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의 혼란조성에 의한 국력 소멸과 미국 내의 여론을 악화시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 저지 및 주한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다.

셋째, 북한은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을 조성시킨다. 북한은 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대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대중의 동원과 지속적인 공격적 행위를 통해 전쟁 발생에 대한 긴장과 위기감을 조성시켜 왔다.

넷째, 북한은 테러 및 대남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이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로 마지못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갈등만 조장할 뿐 진정으로 사과한 사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31) 김태준, 전계서, pp. 274-275.

### (3) 6·25전쟁 이후 집권정부별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북한은 한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테러와 대남도발을 자행해왔다. 북한이 그동안 저지른 테러리즘에 대한 피해의 참혹함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의 테러리즘과 위협만으로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화학 및 생물학전 무기를 다량 비축해 놓고 특수부대 요원이 테러리즘을 자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상태에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테러리즘을 자행한 사례와 테러리즘 수행능력만으로도 우리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극도의 공포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sup>32)</sup>

안보문제의 본질은 위협의 인식으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2010년 4월말 현재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휴전선을 따라 막강한 군사력이 배치된 엄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전혀 변화의 징후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은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분류되었고 불량국가 '악의 축'이라는 지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분위기로 인하여 북한은 테러리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1999년 6월 15일 북한의 NLL 침범과 선제공격으로 인하여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으며, 2002년 6월 29일에는 제2연평해전을 통해 선제공격을 했다. 2009년 11월 10일에는 대청해전이 발생했다. 북한 경비정이 다섯 차례나 경고 통신을 무시하고 NLL을 넘는데다 우리 측의 경고사격에 대해 50여 발의 조준사격을 한 점을 중시, 의도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50년대 이후 한국에 대하여 조직적·의도적인 테러와 대남도발을 자행하여 왔으며, 집권정부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32) 김태준, 전개서, pp. 264-265.

〈표 5〉 6·25전쟁 이후 집권정부별 북한의 대남도발 주요 사례

구 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남·북관계
이승만 정부 (6·25전쟁 이후-1960)	1958년 민항기 납북사건 20건의 지상(내륙) 무장공비 사건 16건의 해상(해안) 무장공비 사건	적대적
박정희 정부 (1961-1979)	1968년 청와대 대통령 습격 기도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70년 국립묘지 폭탄테러(박 대통령 암살미수) 1974년 박 대통령 암살미수 1976년 관문점 도끼만행 사건	적대적
전두환 정부 (1980-1987)	1983년 미얀마 랑군 아웅산 묘소 폭파 1986년 김포공항 폭파 1987년 KAL기 공중폭파	적대적
노태우 정부 (1988-1992)	4건의 어선 피랍(전원 귀환) 1건의 무장침투	적대적
김영삼 정부 (1993-1997)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 1996년 주블라디보스토크 최덕근 영사 피살(북한추정) 1997년 이한영 피살(북한 추정) 1997년 조선일보 및 KBS 테러위협	적대적
김대중 정부 (1998-2002)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우호적
노무현 정부 (2003-2007)	대남 테러리즘은 거의 없음 2006.10.9. 1차 핵실험	우호적
이명박 정부 (2008-2010. 4월말-현재)	2008.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2009.5.25. 2차 핵실험 2009.11.10. 대청해전	적대적

\* 출처 : 김태준, 『테러리즘-이론과 실제』, (서울 : 불명, 2006), p. 437; 조선일보, “과거 북한의 유감 표명 사례”, (조선일보, 2009. 9. 9), A4면; 조선일보, “북 NLL 침범...남, 북 경비정 격퇴”, (조선일보, 2009. 11. 11), A1면; 조선일보, “대청해전”, (조선일보, 2009. 11. 17), A6면.

6·25전쟁 이후 집권정부별 북한의 대남도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승만 정부(6·25전쟁 이후 1953-1960)는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북한은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58년 민항기 납북 사건을 비롯하여 20건의 지상(내륙) 무장공비 사건, 16건의 해상(해안)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1961-1979)는 북한과의 본격적인 체제 경쟁적 시기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의 대남 도발이 많이 자행된 시기이다. 항공기 납치와 어선 납치,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 등이 있었으며, 대통령을 살해하여 북한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를 혼란 속에 넣어보려던 시기이다.

전두환 정부(1980-1987)는 대남도발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1983년 미얀마 랑군에서 대통령 암살 기도, 1987년 KAL기 폭파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서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1988-1992)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랍되었던 4건의 어선이 전원 귀환하였으나 1건의 무장침투가 있었다.

김영삼 정부(1993-1997)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서해상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1연평해전이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7)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대남도발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0. 5 현재)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이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2009년 11월 10일에는 대청해전이 발생하였다.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테러와 대남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들의 정치적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의 집권정부가 그들과 적대적 또는 우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대남 적화전략을 구사하기 위하여 테러와 대남도발을 일삼고 있다. 살인·암살·폭파 등 테러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혼란을 획책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대남도발 전략의 수행 방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대별·집권정부별 북한의 대남도발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연대별·집권정부별 북한의 대남도발의 특징비교

연대	집권정부	남북 관계	대남도발 유무	대남도발의 특징
1950	이승만 정부 (1953-1960)	적대적	지상(내륙) 20건 해안(해상) 16건 1958년 민항기 납북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 시행기 계속적·주기적인 대남도발 사건 다수 자행
1960 1970	박정희 정부 (1961-1979)	적대적	1968년 대통령 암살기도 지상(내륙) 15건 해안(해상) 9건	남·북한 체제 경쟁기 항공기 납치와 어선 납치, 대통령 암살기도
1980	전두환 정부 (1980-1987)	적대적	1983년 미얀마 랑군에서 대통령 암살 기도 1987년 KAL기 폭파 지상(내륙) 4건 해안(해상) 7건	대남도발 사건의 절정기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노태우 정부 (1988-1992)	적대적	어선 피랍 4건 무장침투 1건	대남도발 소강기 대남도발 사건 소수 발생
1990	김영삼 정부 (1993-1997)	적대적	1996년 동해안잠수함 침투 지상(내륙) 2건 해안(해상) 3건	대남도발 지속기 계속적·주기적인 대남도발
	김대중 정부 (1998-2002)	우호적	해안(해상) 4건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의도적·대형화 대남도발기 우호적인 남북관계와 무관한 도발 자행
2000	노무현 정부 (2003-2007)	우호적	2006.10.6. 1차 핵실험	간접적 대남도발 시행기 대남 테러리즘 거의 없음
	이명박 정부 (2008-2010. 4월 말)	적대적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 2009.5.25. 2차 핵실험 2009.11.10. 대청해전	의도적, 직·간접적 대남도발기

\* 자료: 필자 정리

## 4.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 과제

### (1)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 상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남한에 대한 체제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은 전쟁준비를 통한 내부의 긴장감 조성과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미·북 핵 협상 이후 대미·일 유화자세와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이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서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제1·2연평해전<sup>33)</sup>, 2009년 11월 대청해전이 있었다. 북한은 2007년 10월부터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담수를 시작하여 2009년 2월 완공한 이후 9월 6일에는 물을 방류하는 수공(水攻)으로 6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sup>34)</sup>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대남혁명전략용으로 쓰이듯 북한지역 임진강, 북한강 수계상의 모든 댐들은 수공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 사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적화통일의 목표를 변화시키지 않고 대외 개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북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유도하여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현재의 김정일 체제의 붕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도라고 판단한

33) 조선일보, 2002. 5. 4, p. 29.

34) YTN 2009년 11월 9일 보도에 의하면, 2009년 9월 6일 북한 황강댐에서 물 4,000만 톤이 무단 방류돼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에서 한 번에 많은 물을 흘려보낼 경우,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반대로 황강댐에서 물을 가두고 아예 방류하지 않아도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이 귀한 봄이나 가을 갈수기에 황강댐에서 방류가 중단되면 임진강 양수장 16곳의 기준 수량이 최고 4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근처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양수장 4곳이 취수 기능을 잃게 되고, 연천군과 파주, 고양시 등에 있는 농경지 7,355ha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면, 북한의 전략의도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테러리즘일 것이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북한의 테러와 대남도발을 전망할 수가 있다.

첫째,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와 대남도발의 한 방안은 자체의 특수 공작요원을 이용한 것이다.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사건, 1986년의 김포공항 폭파사건, 그리고 1987년 김현희에 의한 KAL 858기 공중폭파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체의 특수 공작요원에 의한 테러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적인 여론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북한이 테러를 감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의 공작에 의한 테러로 분명하게 밝혀져도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한국 내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배후조작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증거는 2002년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침몰한 피선박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공작원들의 시체가 선체에 묶인 것이 발견됨으로써 입증되었다.<sup>35)</sup>

둘째, 국내의 급진 좌경세력과 연계된 테러 가능성이다. 이에 대한 첩보로서 1990년 12월 일본公安청은 조총련이 일본을 관광하고 있는 한국인을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양성하고 한국의 반정부 인사들을 일본에 초청하여 포섭하는 등 불법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리 측에 경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급진 좌경 세력이 폭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지지획득이 어려워지고 또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핵심 분자들이 운동권에 잠입한 다든가, 북한 및 일본 극좌파와 테러리즘 조직과 연계하여 극렬 투쟁의 일환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35) 요미우리 신문은 “피선박 승무원들이 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박과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국적확인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부러 자신들의 몸을 선체에 묶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승무원 시체들 배에 묶여 있어,” 2002. 5. 6, p. 15.

〈표 7〉 북한 핵무기 사태 주요 일지

구분	연도	월일	개발/생산 활동
배경	1962	1	구 소련의 지원으로 IRT-2000형 원자로 건설
	1974	9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85	12.12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가입
	1991	12.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1차 위기	1993	2.10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용촉구(5일 뒤 거부)
		3.12	북, NPT 탈퇴 입장표명
	1994	6.13	북, IAEA 탈퇴선언 제출
		6.15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고위급회담 재개 제의)
		7.8	3차 고위급회담(제네바)
	10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체결; 북, 핵동결 선언	
1995	3.9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정 서명	
2차 위기	2002	10	켈리 미국대통령 특사 평양 방문, 북한의 핵개발 의혹 제기
		11.14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12.27	북, IAEA 사찰단 추방선언
	2003	1.10	북, NPT 탈퇴선언
		2.12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
		4	베이징 3자회담 개최(북, 이근 대표 핵보유 시인)
		8	베이징 1차 6자 회담
	11.21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1년간 중단 발표	
	2005	9.19	제4차 6자 회담: 9.19공동성명 발표(북-핵포기, 미-평화공존보장)
		9	미국, 북한산 위조 달러에 대한 강경조치 - 금융제재(거래중지, 계좌 동결)
	2006	7.5	북,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10.9	북, 1차 핵실험 강행
		10.15	UN, 대북 제재 결의안(1718호) 통과
	2009	5.25	북, 2차 핵실험 실시
		6.12	UN, 대북 제재 결의안(1874호) 통과

\* 출처 : 강창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과정과 대응책 모색」, 『軍史』 제69호,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12), p. 346; 북, 2차 핵실험 추정지역 위성사진(2009. 5. 25), Chosun.com 포토(검색일: 2009. 10. 11).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핵 관련 정보당국의 평가는 북한의 핵실험 실행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북한이 개발 중이었던 플루토늄 탄은 동위원소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고



폭장치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해 핵실험이 꼭 필요할 것임을 예견했으나, 국제 환경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실행여부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북한이 전반적인 핵 기술의 보유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2009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생산 활동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북한은 핵 장치의 소형화와 운반수단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는 핵무기 개발 후 핵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운반수단의 확보이며, 주로 이용되는 것이 미사일이다. 북한은 1993년 5월 동해안에서 노동1호(사거리 1,000-1,300k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고, 1998년 8월 대포동1호(사거리 1,500-2,000km)를 시험 발사하였다. 2006년 7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 내리고 있으나, 북한의 자체 미사일 수준은 매우 높다는 평가이다.

<표 8>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일지

연 도	개발/생산 활동
70년대 초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 및 미사일 기술획득(추정)
1976~81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하여 역설계/개발
1984. 4	스커드-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
1986. 5	스커드-C 미사일 시험 발사
1988	스커드-B/C 작전 배치
1990. 5	노동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
1991. 6	스커드-C 미사일 발사
1993. 5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
1994. 1	대포동 미사일 최초 식별
1998	노동미사일 작전 배치
1998. 8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 측: 위성발사 주장)
2006. 7	대포동 2호 시험 발사 및 노동, 스커드 미사일 발사
2007	중거리 미사일(IRBM) 작전배치

\*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2006), p. 206; 강창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과정과 대응책 모색」, 『軍史』 제69호,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12), p. 353;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2009), p. 269.

그러나 개발한 핵탄두가 무기로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소형화 기술이 필요한데, 노동, 대포동 미사일의 탑재능력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생산 활동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점점 더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미사일 기술향상으로 사거리가 연장되어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핵무기, 화생무기 등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으며, 북한 미사일이 제3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수출되어 해당 지역 및 세계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구 분	FROG	240mm 다련장 로켓	스커드B	스커드C	노동I	대포동I	대포동II	ICBM
사정거리 (km)	35-70	60-70	320-340	500-550	1,000-1,400	2,000	3,500-6,000	9,000-10,000
탄두중량 (kg)	450	90	1,000	500-700	770-1,200	1,000	700-1,000	1,000
수량 (1999)	100-450	>10,000?	200-650	180-550	70-95	-	-	-
수량 (2010)	?	>10,000	200-650	300-700	70-95	150-200	50-75	25-50
발사대당 미사일수	4-10	60-500?	10-20	10-20	3-10?	2-3	2-3?	2-3?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개발 중

\* 출처 :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2009), p.269; Bruce Bennett, RAND, "The Emerging Ballistic Missile Threat: Global and Regional Ramifications," 1999 Airpower Conference in Seoul.

## (2) 대남도발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시행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전략적 도구로서 테러와 대남도발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전통적 전쟁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적대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쟁 방식이 되고 있다. 대테러(Combatting Terrorism)란 테러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활동을 하거나 테러사건 발생 이후에 취해지는 대응활동의 체계적인 수단 및 방법을 말한다. 테러 위협에 대한 대테러 전략은 테러를 제압·대응하는 공세적 대테러 전략(Counter-Terror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방어적 대테러 전략

방어적 대테러 전략은 테러분자와 조직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악하여 테러조직의 와해, 테러분자의 접근차단, 테러대비 준비계획 및 교육훈련 등으로 테러를 방어하는 사전적 저지·예방활동 개념이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사전적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① 테러발생 원인의 환경 요소제거, ② 테러활동 근거지 봉쇄 및 무력화, ③ 테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활동, ④ 테러분자의 공격목표 접근차단계획 및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다.

### 2) 공세적 대테러 전략

공세적 대테러 전략은 테러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테러를 처리하는 사후적 제압·대응관리 개념이다.

효과적 사후적 대응활동을 위해서는 ① 테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대책의 즉각 조치단계, ② 국제적 협력과 국가적 위기관리체계 발동단계, ③ 테러 사후관리의 우선순위 결정단계로서 피납자의 안전한 구출, 물리적인 강경진압, 테러분자와 협상의 신축성 있는 대응 중 어느 한 방안을 선택하는데, 이때는 인도주의적 고려·국제적 압력·국내여론·테러 집단의 저항력 및 위협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④ 테러의 원인과 유형에 따른 요구조건 악화 혹은 폭력행위 확대에 따른 대응책 시행단계,

⑤ 테러의 종결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테러위기관리 실패로 테러와의 전쟁이 확대되면 국제적 분쟁이나 군대가 동원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발전한다.

방어적 대테러 전략과 공세적 대테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① 국제적·국가적인 첩보 및 정보에 의한 테러위협 분석 및 협조, ② 국가적 전략시설 및 장비로써 국가통치 및 C4I 체계, 교통기관, 전력시설, 댐 시설, 대형건물, 유류 및 가스시설, 국방시설 그리고 개인 대중보호 등에 대한 위협상태 및 취약점 평가, ③ 인원보안, 시설보호, 경계 및 대처 교육훈련의 예방활동, ④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3)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대남도발 대응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응함이 중요하다. 국제협력의 범위는 범세계적·지역적 수준, 직접적인 관계국 간의 수준 등 다원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테러 대형화에 따라 테러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테러에 대한 억제와 처벌 방안은 일반 국제법적 차원의 선언적 수준이고 미약하다. 테러 퇴치를 위해 국제 사회의 강력한 연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입한 테러방지 관련 국제협약 12개를 요약·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협약명	가입국	발효일	한국 가입현황	북한 가입현황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63년 동경 협약)	178개국	69.12.4	71.2.19비준	83.5.9가입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70년 헤이그 협약)	177개국	71.10.14	73.1.18가입	83.4.28가입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71년 몬트리올 협약)	180개국	73.1.26	73.8.2가입	80.8.13가입
4.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73년 뉴욕 협약)	146개국	77.2.20	83.5.25가입	82.12.1가입

협약명	가입국	발효일	한국 가입현황	북한 가입현황
5.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79년 뉴욕 협약)	138개국	83.6.3	83.5.4가입	91.11.12가입
6.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80년 비엔나 협약)	105개국	87.2.8	82.4.7비준	미가입
7.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 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88년 몬트리올 의정서)	148개국	89.8.6	90.6.27비준	95.7.9가입
8.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88년 로마 협약)	112개국	92.3.1	93.5.14가입	미가입
9.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88년 로마 의정서)	100개국	92.3.1	03.6.10가입	미가입
10.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91년 몬트리올 협약)	110개국	98.6.21	02.1.2비준	미가입
11.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97년 뉴욕 협약)	123개국	01.5.23	04.2.17비준	미가입 (01.11.12서명)
12.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협약(99년 뉴욕 협약)	117개국	02.4.10	04.2.17비준	미가입 (01.11.12서명)

\* 출처 :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서울 : 백산출판사, 2006), pp. 639-703; 국가정보원,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및 국제협약』 대테러정보자료집, (서울 : 국가정보원, 2006. 11) 참조 정리.

#### (4)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대응

북한은 아직 우리에게 이중적인 존재이다. 화해의 대상인 “민족(통일 동반자)”이라는 얼굴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주적(안보위협)”의 얼굴이라는 뜻이다.<sup>36)</sup> 북한의 핵게임의 실체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일은 기본이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신전략 수립 또는 한국형 전략무기 개발 등 필요한 국가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sup>37)</sup>

2001년 9·11테러 이후 북한과 같은 테러를 지원하는 이른바 “불량 국가(rogue states)”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무장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

36) 김태우, 한반도 어디로 가야 하는가-안보와 화해협력, 평행 이뤘야, 통일정보신문(제225호), 2004. 5. 3, p. 10.

37) 김태우, 「북한 핵보유 선언서 파장과 한국의 생존전략」, Strategy 21 통권 제11호(2003 봄·여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 68-103.

협하면서, 이른바 「악의 축(an axis of evil)」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38)</sup> 미국은 특히 미사일 수출 등을 통한 북한과 테러리스트들의 연결고리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이라크 외에 북한을 명시적 위협국으로 지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세계 제일의 탄도 미사일 제공국가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39)</sup>

2002년 10월 이후 북한 핵개발 문제가 국제 현안문제로 부각되면서, 부시행정부는 북핵에 관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 왔다.

첫째, 북한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북핵 불용을 위해 “평화적” 또는 “외교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군사적 대응을 포함하는 모든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40)</sup> 3자 회담장이 북한이 핵보유를 시인하고 이른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sup>41)</sup> 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은 효과적인 대북핵 전략<sup>42)</sup>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라크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관점에서 이라크보다 북한이 더 위험하고 위협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43)</sup>

38)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의 State of the Union 연설 참조.

39) 2002년 9월에 공포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참조: “In the past decade North Korea has become the world's principal purveyor of ballistic missiles.”

40) 콜린 파월(Collin Powell) 미 국무장관, 2003년 2월 11일 미 상원 예산위원회 증언: “미국은 군사력의 전면적인 능력과 선택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이에 앞서, 부시 행정부는 6일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설과 선제공격 주장에 대해 외교적 해결 입장을 밝히면서도, 군사적 방안을 뜻하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후 많은 부시 행정부 각료들에 의하여 이러한 지침이 언급된 바 있음.

41) 북한은 지난 4월 23~25일 베이징 3자회담에서 “조(북)·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전부더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핵포기-불가침조약」 구도로서, 이를 동시추진하지는 전략인 것으로 추정된다.

42)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는 김태우·김재두, 『미국의 핵전략 우리가 알아야 한다』, 살림출판사, 2003. 4. pp. 19-187 참조.

43)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 씨는 2003년 2월 2일,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불리한 모호한 증거는 실제보다 더 무섭게 만들었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관한 무서운 증거는 실제보다 더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03년 2월 3일.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은 2월 17일자에서 미국이 북한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늦추는 채, 이라크 무장해제에 역점을 두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표 11〉 유엔 안보리(UNSC) 대북제재 결의안 비교

구 분	UNSC 결의안 1718(2006.10.15)	UNSC 결의안 1874호(2009.6.12)
결의안 채택배경	· 북한 1차 핵실험(2006.10.9)	· 북한 2차 핵실험(2009.5.25)
화물 검색	· 북한행·북한발 화물 검색에 대한 협조조치를 요구하는 수준	· 무기 금수 대상 확대 -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수출 금지(단, 소형무기 제외) - 회원국들의 북한 무기수출 및 이전 금지
무기 금수·수출 통제	· 재래식 무기는 검색 대상에 미포함 · 선박에 대한 검색 관련 조항 부재 * 무기금수 대상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중화기에 국한	· 재래식 무기까지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무기금수 품목 증가 * 무기금수 대상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중화기에서 사실상 모든 무기로 확대 ·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신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 동시기 공해에서도 검색 가능
금융·경제제재	·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정도만 동결	· 무기 활동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금융 거래 전면 차단 · 기존의 경제 제재범위에 대북 금융지원, 무상원조, 차관 신규 계약금지, 기존 계약 감축 노력 등을 포함

\* 출처 : 외교통상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문화일보, 2009. 6. 13) :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 vs 1718호'(연합뉴스, 2009. 6. 13) 등 국내 언론보도 내용 정리

셋째, 미국은 북한과의 다자 협상 틀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확대 다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중국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4)</sup>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이 전반적인 핵 기술의 보유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2009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실

44)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3년 6월 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전달한 북한 측의 미·북 양자회담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됨.

시하였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1718호)보다는 2차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 더욱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핵 장치의 소형화와 운반수단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는 핵무기 개발 후 핵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운반수단의 확보이며, 주로 이용되는 것이 미사일이다. 북한은 1993년 5월 동해안에서 노동1호(사거리 1,000-1,300k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고, 1998년 8월 대포동 1호(사거리 1,500-2,000km)를 시험 발사하였다. 2006년 7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 내리고 있으나, 북한의 자체 미사일 수준은 매우 높다는 평가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점점 더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로, 미사일 기술향상으로 사거리가 연장되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핵무기, 화생무기 등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으며, 북한 미사일 또한 제3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수출되어 해당 지역 및 세계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5. 결 론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는 객관적인 상태로 진단한다면 결코 하나의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적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국가라고 하더라도 저급한 수준의 집단이든지 아니면 하나의 왕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나 인민을 위한다는 것은 이미 허울 좋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그 진실의 내면을 살펴보면 공포수단을 구비한 군사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 역시 북한이 대남도발을 그들의 대외 정책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어 심각성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전면적인 무력 전쟁을 도발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판단 아래 북한은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방식의 하나인 테러 정책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테러 정책을 고수하면서 한국 내부의 불안과 혼란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무력 적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지금까지 주도해 온 대남 전략 전술은 폭력과 돌발적인 테러로 일관해 오고 있다. 1983년 아웅산 암살 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 858기 사건은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고 지시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며, 이들 사건들은 김정일의 대남 전술이 출발부터 폭력과 테러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96년에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과 최근의 '3·26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한국 정부를 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적화 통일을 위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이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개방이라는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면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선군사상에 의존하는 '벼랑 끝 전술'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바로 핵심적인 수단이 그리고 오늘날 북한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핵이라는 유일한 카드로 보인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맞서는 무모한 "수퍼파워게임"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체제로의 변신을 시작할 때 한반도에 드리워진 핵그림자는 물러날 것이며, 때문에 진정한 핵타결이란 북한의 핵폐기와 함께 북한의 민주주의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sup>45)</sup> 북핵문제는 외교협상을 통

45) 김태우, 북한의 외교공세와 핵문제의 본질, 『주간국방논단』, 제978호(04-3), 한국국방연구원, 2004. 1. 19, pp. 7-8.

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이 되어야 한다.<sup>46)</sup>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경제, 외교 및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압제재를 해나가야 한다. 경제 및 외교적 제재 면에서 경제적 제재는 세계은행총회 읍서버자격 초청 철회,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수출 통제, 경수로 및 중유 지원의 중단 등이 있고, 외교적 압박조치는 중·러를 통한 대북외교압력,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서방 및 동맹국에 외교적 단교 요청 등이 포함된다. 군사적 제재는 해상·공중 무력시위, 해상봉쇄, 핵시설 및 군사기지의 선제공격이 포함된다.<sup>47)</sup>

(원고투고일 : 2010. 3. 25, 심사수정일 : 2010. 4. 29, 게재확정일 : 2010. 5. 10)

주제어 : 테러리즘, 북한, 대한민국, 대테러, 항공기 공중납치(Hijacking), 사이버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북방한계선(NLL), 대테러, 주한미군 (USFK)

46) 이러한 경우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양도방식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식 핵무기 포기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핵무기 양도대가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동북아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당사자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이전 및 해체비용을 부담, 이를 검증하며 사찰, 플루토늄 및 농축 우라늄을 넘기는 대가로 이해당사국들이 중유와 전력 및 가스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47) 이러한 군사제재는 쿠바형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해외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쿠바형 해상봉쇄는 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나포가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미국과 스페인 군함은 15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탄두를 싣고 예멘으로 접근하는 북한 선박 서산호를 나포한 뒤 예멘정부의 확인 후 통과시킨 적이 있다.

<ABSTRACT>

## North Korea's Terrorism and Provocations after the Korean War against the ROK and Its Countermeasures

Kang, Chang-kook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North Korea (NK)'s Terrorism and Provocations after the Korean War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In this article, I studied about the organizations of terrorism and provocation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ROK) after the Korean War (1950-1953). And, I suggested the measures of counter-terrorism.

A cases of the provocations by NK after the Korea War were studied periodically and each ruling governments. In the study, many types of terrorism such as assassinations against VIPs, kidnapped of hostages, suicide bombing and demolition, aircraft terrorism, attacks against airline facilities and their users, vessels kidnapped and demolition on the sea, terror on the cyber, terror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re studied. NK mostly executed terrorism such as assassinate against VIP, aircraft terrorism, kidnapped civilians and fishing boats capturing, and terrorism against the major facilities.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against the ROK are as the followings: ① direct support for terrorism by the NK, ② objectives of terrorism are limited to the ROK, ③ violent terrorism is supported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ower, ④ purpose of reducing the internal dissatisfaction of the NK and making tensions, and raising anti-ROK feeling, ⑤ minor excuse statements about the terrorism executed by the NK, ⑥ making chances for division and disorder of the ROK and unification by the NK.

In conclusion, the probable terrorism and provocations against the ROK by NK are exist. NK will execute terror and provocations against the USFK factuallities too. And NK will use th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 can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or terrorism against NK such as understand and application about strategies for counter-terrorism,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preventing tense against the ROK by NK, establishment of response measures for terrorism by NK.

Key Words : Terrorism, North Korea (NK), The Republic of Korea (ROK), Countermeasure, Aircraft Hijacking, Cyber Terror,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rror, NLL(Northern Limitation Line), Counter-Terrorism,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USFK)